

기획재정부		보도자료	
보도일시	2021. 7. 22.(목) 13:30	배포일시	2021. 7. 22.(목) 11:30
담당과장	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장 천재호 (044-215-4510)	담당자	이현태 사무관 (leht@korea.kr)

「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」 겸 「제1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」 개최

-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'21.7.22.(목) 10:00 정부서울청사에서 「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」 겸 「1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」를 주재하였음
- 금번 회의에서는
 - ① 경제동향 및 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·보고,
 - ② 한국판 뉴딜 분과별 점검·보고,
 - ③ 반도체·배터리·백신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선정(안),
 - ④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,
 - ⑤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,
 - ⑥ '한국판 뉴딜 2.0' 향후 추진계획
 안전이 논의되었음

※ (붙임) 1. 부총리 모두 발언

2.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

※ (별첨) 1.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

2.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

붙임 1

부총리 모두 발언

- 지금부터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(경제 중대본)회의 겸 제13차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시작
- < 한국판 뉴딜 2.0 추진 가속화 >
- 코로나위기를 겪으며 목격하는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가속화, 글로벌 선도 경쟁의 치열성 등 급격한 환경변화와 함께 더 벌어진 격차양극화의 완화 시급성 등 감안시 코로나 회복후 단순히 "코로나 이전으로의 회귀"가 아니라 "전혀 다른 미래로의 대변혁(Big Change)"이 예상
- 이에 정부는 지난 7.14일 기존 한국판 뉴딜계획을 환경변화에 맞게 한 단계 진화시켜 업그레이드한 소위 "한국판 뉴딜 2.0"을 발표*, 추진
 - *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을 3축 구조로 하는 220조원 규모 한국판 뉴딜 2.0을 발표
- 이러한 뉴딜 2.0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는 ①재정지원, ②제도개편, ③민간참여라는 3가지 측면에서 몇몇 가시적인 정책방향을 既발표(7.14)
 - ① 먼저 내년 예산편성이 한창 진행중인 바, 내년 뉴딜사업 예산으로 30조원 이상 반영할 계획(21년 예산 : 21조원 + 추경 1.5조원)
 - ② 그리고 디지털경제·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, 노동자의 안정적 고용전환대책 등 이달 중 지원방안 발표를 약속.
 - 이에 금일 회의시 사업구조개편 지원방안, 노동공정전환 지원방안을 상정 논의
 - ③ 또한 올해 하반기중 상반기 조기완판된 '국민참여 뉴딜펀드'를 1천억원 추가조성 출시하여 국민 참여기회 확대 추진
- ☞ 정부는 코로나위기 극복, 경기회복 뒷받침 그리고 미래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향한 "한국판 뉴딜 2.0" 추진을 국정 최우선순위에 두고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

< 금일 회의 주요 논의 >

- 오늘 회의에서는
 - ① 반도체·배터리·백신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선정(안)
 - ②-1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
 - ②-2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
 - ③ '한국판 뉴딜 2.0' 향후 추진계획 등 4건을 상정·논의함

< 국가전략기술 투자 촉진 >

- 첫 번째 안건은 '반도체·배터리·백신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선정(안)'임

- 정부는 '21년 하경정'에서 반도체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, 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확대는 물론 R&D 및 시설투자상 세제지원을 별도 트랙으로 하여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공표

→ 이에 금일 회의를 반도체(산업의 쌀), 배터리(제2반도체), 백신(백신 자주권)을 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하여, 세부대상 핵심기술(총 65개 기술시설)들을 선정하고, ①23년까지 2조원+α 설비투자자금 집중 지원 및 ②R&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폭 상향(7.26일 발표된 21년 세제개편안에 반영) 방침

- 두 번째, 세 번째 안건은 한국판 뉴딜 2.0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후속과제 즉 ①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과 ②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임

- 최근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글로벌 경쟁력 선점유지, 안정적 고용전환 등을 위해서는 기업의 사업구조개편,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이 매우 긴급

- ① 먼저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를 통한 선도형 산업구조로의 조기전환을 위해 ①사업재편전환제도 개선 ②사업구조개편 기업의 인센티브 강화 등 추진

- 첫째 디지털 전환, 탄소중립 등 외부요인에 따른 구조개편도 사업 재편·전환에 포함*시키고 이를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(관련법 개정)

* 사업재편 : (現)과잉공급해소, 신산업 진출, 산업위기지역 → (改)외부요인 추가
사업전환 : (現)업종전환, 신규업종 추가 → (改)탄소배출 저감, 사업모델 혁신 추가

- 아울러, 탄소중립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에도 공정거래법 규제특례 부여하고, 대·중소기업 중소기업간 공동 사업재편전환 지원 규정도 마련

* 지주회사-자회사-손자회사 행위제한 규제 3년간 적용유예 등

- 또한 사업재편기업 대상 1,000억원 규모 P-CBO 보증 지원(’21년), R&D 지원 확대 및 자산매각 대금을 신규투자에 활용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적용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

- 아울러 5,000억원 규모의 사업구조개편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신규 조성(산은, ’21년)

- ② 다음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으로 안정적인 고용전환과 지역 산업구조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전망에 기초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

- 먼저, 재직자 역량강화·직무전환 지원을 위해 향후 고용감소가 예상되는 석탄화력발전·내연자동차 산업 종사자 대상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(~’25, 10만명)을 신설시행하는 한편 사업주 훈련을 개편하여 디지털기초 원격훈련의 지원비율(50→90%)과 대상(’21. 27.6→’22~’25. 연간 100만명)을 확대

- 특히, 지역훈련 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산단을 중심으로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신설·지원(~25년 35개소)

- 또한, 내연자동차 사업체 집중지역에는 미래차 전환을 위한 제조혁신·리모델링 등 산단대개조를 지원하고, 석탄발전 폐쇄지역에는 LNG 발전 단지 조성 등 대체산업 육성도 선제적으로 추진

* ’21년 예비선정지역(총 5개): 경기, 경남, 부산, 울산, 전북

- ☞ 향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」을 구성·운영하여 사업구조개편 및 노동전환을 통합 관리·지원해 나갈 계획

붙임 2
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

◇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,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구분	담당부서		담당과장	담당자
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	기재부	미래전략과	최재혁 과장 (044-215-4910)	김민진 사무관 (044-215-4920)
	산업부	기업정책팀	박홍일 팀장 (044-203-4230)	마선영 사무관 (044-203-4231)
	중기부	재도약정책과	임상규 과장 (044-204-7480)	송성동 사무관 (044-204-7482)
	금융위	산업금융과	김성조 과장 (02-2100-2860)	이영민 사무관 (02-2100-2865)
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	고용부	고용정책총괄과	편도인 과장 (044-215-7210)	이지은 서기관 (044-215-7214)
	기재부	일자리경제지원과	조영욱 과장 (044-215-8550)	최성영 사무관 (044-215-8551)